

# 自由主義 發展理論에 관한 再考察

金 光 雄\*

.....〈目 次〉.....	
I. 發展을 보는 상이한 시각들	2. 保守主義 發展理論
II. 理念的 視角에 다른 發展理論들	3. 네오마르크시스트 發展理論
1. 自由主義 發展理論	III. 自由主義 發展理論 再考

## 〈요 약〉

이 글은 資本主義 발달 후기에 나타나는 비판적 증후를 革命이 아닌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自由主義 발전이론」의 일단을 소개한 것이다. 자유주의 발전이론의 현실적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던서, 동시에 발전에 관해 다른 이념적 시각을 갖는 「保守主義 발전이론」과 「네오 마르크시스트 발전이론」에 관해서도 일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의는 이 나라의 발전이 어떤 이념적 시각에 기초한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적정한가를 염두에 두고 그 함의를 새겨보려고 하였다.

주로 레오나드 바인더의 「발전이론사」에 관한 논문에 의존하였으므로 이 글이 독창적이지 아니며, 그렇다고 글 안에 담겼을지도 모를 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은 『國家發展의 이론과 전략』이라는 또 다른 논문을 위해 이념적 시각론을 다져보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 I. 발전을 보는 상이한 시각들

지금까지 국가나 국민 개개인 모두가 거의 예외없이 金科玉條처럼 신봉해 왔던 발전이론은 近代化理論(modernization theory)이었으며, 이 이론의 바탕(paradigm)은 實用的·多元主義的(pragmatic-pluralist)인 것으로서, 이는 自由主義의 형태를 띄고 대중참여와 공정분배를 지향하는 民主主義的 正統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實用主義的이고 多元主義的인 ‘파라다임’이 질서보다 자유를 앞세우

\* 서울대 行政大學院 教授

면서 각분히 목표지향적인 가운데 構造的 不平等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이로 인해 이 근본바탕이 역사적 상황성이 다른 제삼세계 국가어도 타당한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 의지치 않았던 近代化論과 그 기본원형에 대해 새삼스런 의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비판적 반응은 기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70년대를 접어들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제삼세계 국가군들은 이른바 서양식 발전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資本主義 國家의 발전양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발전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富益富 貧益貧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제기된 또 다른 문제는 多元社會에서의 政府의 位相과 역할 이외에 國家性(stateness)에 관한 것이었다. 그전 까지만 해도 政治를 논할 때 ‘國家’라는 요소는 일단 제외시켜 놓았었다. 그러나 ‘近代的 발전이론’이 어느 나라에서는 타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타당치 않는 원인을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나라마다 상이한 歷史와 傳統을 배경으로 국가성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라에 따라서는 安保·物質的 繁榮·社會秩序·社會性·文化등의 제가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平等·自由·正義·自尊 등의 제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시하는 가치는 국가성의 기도와 관련되어, 전자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의 국가성은 강하고, 반대로 후자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는 국가성이 약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자의 가치, 즉 안보·물질적 번영·사회질서...등을 강조한 입장으로서 국가성은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성이 강하면 全體性도 강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의 가치들을 놓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양자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비중은 달리해도, 하나의 통합된 가치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限界效用의 法則이나 파레토의 最適值같은 개념을 도입해 조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치 융합의 잇슈는 이처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認識이 存在를 규정지워 버리 수공하기 어려운 二元論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상정하면 존재론을 더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면 認識論的 二元論(epistemological dualism)의 영향에서 벗어나 存在論의 一元論(ontological monism)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국가는 필요하며 소망스

러운 것인가의 질문이 제기되기 보다 국가는 실재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러 논의를 피하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던 국가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꾸준히 변해간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재하는 것은 관찰가능한 인간의 행동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주장의 배경은 물론 미국의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것이다.<sup>1)</sup> 이 관찰가능한 행동에 대한 강조는 심리적 요인과 칸티안 類의 믿음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며, 한편에서 집단을 분석단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대판이 국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이 입장은 還元主義의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밑바탕은 合理主義와 物質主義가 떠받치고 있다. 벤틀리는 이것 없이는 共存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정치적 행동이 가능치 않다고 피력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기본전제로하는 실용적 시각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만이 꾸준한 변화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실용적 존재(pragmatic being)의 形而上學的 진리에 보다 가까운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정치적 가치가 배분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은 변하는 것과 변치않고 고정되는것(제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多元主義의 이데올로기가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느냐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앞선다. 이념적으로 말해서 다원주의는 생각만큼 실용적이지 못하며 사실을 설명하기에 적합치 못하다. 더우기 실용적 시각이 存在論的 입장을 規範的 입장으로 바꾸어 자연적 실용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정치체제를 구분해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달리 말해서 정치적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것들, 즉 生産樣式이나 支配樣式과 관련이 깊은 계급지배·군부지배·국가기구에 의한 지배·코포라티즘·연합체 등으로 굳어져 버린 정치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정치체제도 시간을 공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卽時的이기 보다는 恒常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그렇다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敵이라는 自由主義者들의 생각이나 秩序를 제일의적인 것으로 중시하는 保守主義者들의 생각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어떤

1)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Bentley이다. 그후 Harold Lasswell, David Easton, Karl Deutsch 및 David Truman 등이 입장을 잇고 있다. Arthur F. Bentley (1908) *The Process of Government: A Study of Social Pressures*(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형태도라도 규제역을 담당하는 국가의 역할이 反自然的·反科學的·反近代的·反民主的이라는 생각은 공통하다. 그런 가운데에도 여기서 외면치 말아야 할 것은 自然的인 것과 非自然的인 것간의 구별인데, 自然的인 것은 原子的·實用的(at mic-pragmatic)인 것이고 非自然的인 것은 규제된 것, 제도화된 것, 혹은 입법화된 것을 이른다. 이러한 구분도 실은 얼마나 정확하고 실제적인지에 의문을 남는다. 올슨의 집합행동의 논리대로면 집단과의 과정이 무작위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짜이고 그래서 예측가능한 것이냐중에서 후자쪽에 치우치겠지만, 반드시 맞지는 않기 때문이다.

## II. 이념적 시각에 따른 발전이론들

### 1 自由主義 발전이론

이 입장은 말할 것도 없이 실용적·다원주의의 파라다임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와 제삼세계에 대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발전이나 근대화이론에 대한 이 자유주의적 접근입장은 두 개의 이론적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文化的 실용성을 현대문화관념과 연결시키는 「파르소니안 이론」이고<sup>2)</sup>, 다른 하나는 「벤틀리안 형이상학 과정론」이다. 널리 알려진 文化的 實用論은 파슨스의 행동체계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도한 바대로 동기가 뚜렷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현존하는 문화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변하고 적응하는가를 결정한다고 한다. 현대문화의 개념은 가치는 그 자체 변하고 개인의 변하는 의도따라 더 빨리 변한다고 믿는다. 명제로서의 문화가 반명제로서의 경험과 잇물려 조화를 이루면서 변한다는 발전의 변증법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버마스같은 사람이 명백히 하고 있다. 믿음 체계의 근대화는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sup>3)</sup> 한편 과정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벤틀리의 견해는 문화적 실용성과 과정의 형이상학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이것이 自由主義 발전이론의 낙관적 견해를 설명해 준다.

자유주의 발전이론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政治發展·近代化·民主主義 등이 상당기에 걸쳐서 종국적으로 이루어 지기는 하는 것인데, 그 전제는 변화

2) T. Parsons and E. Shils(1950)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Glencoe: Free Press).

3) Jürgen Habermas(1975) *Legitimation Crisis* Thomas McCarthy, trans.(Boston: Beacon Press), 7, 89.

가. 사회체제의 구석 구석에 파고 들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변화들——도시화·교육·화·매체의 변화·정치참여·경제성장 등은 기존의 전통체제를 바꾸면서 변화와 발전의 두드러진 징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나. 근거가 자유주의 발전이론인 점은 확인을 요치 않으나 우리의 발전 전략가들이 이점을 명심하고 있느냐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후술하겠지만 이 나라가 발전 전략의 기본모순이자 약점은 바로 이 점으로서 변화양상은 자유주의 발전이론을 토대로 삼으면서 그 추진방식은 반자유주의적이었다는 데 있다) 어쨌든 이 입장은 平等主義를 지향하면서 정치체제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近代性(modernity)은 지속적 변화를 이끌고 나가는 능력인 바, 이를 누가 주도하느냐고 했을 때 社會的 動員(social mobilization) 같은 변화과정을 非政府的 社會勢力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4)</sup>

自由主義 발전이론은 1950년대말과 1960년대에 걸쳐 풍미했다. 이 이론의 결과적으로는 開途國의 이해를 미국의 지배계급에 예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종종 지적된다. 그러나 반면에 자유의 잠재력이나 그 가능성을 심어주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유주의 발전이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정치참여를 무한정 확대시키기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성격조차 띄고 있으며, 기존 제도, 전통엘리트, 종교집단, 분배연합체등에 맹공을 가하기도 한다. 이것이 미국의 대개도국 원조 내지는 발전전략의 실체인데 이론적인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수혜국으로 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등 신 식민지 정책이라는 등 강한 저항을 받기 일췌이다. 이에 대해 保守主義者들이나 마르크시스트들이 강한 비판을 퍼붓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 발전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주의 발전이론이 파슨스의 이론에 얼마나 쏠려 있느냐가 궁금하다. 발전이론의 기초개념과 파슨스의 행동체계·유형변수·기능적 요소등을 연결시켜 보면 그 관계를 대강 알 수 있게 되는데, 파슨스의 발전이론을 후코의 표현을

4) 앞의 주장은 Eisenstadt가, 그리고 뒤의 주장은 Deutsch가 했다. S.N. Eisenstadt (1964) "Modernization and Conditions of Sustained Growth," *World Politics* 16:4(July), 576-94; Karl Deutsch (1960) "Toward an Inventory of Basic Trends and Patterns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4:1(March), 34-57.

5) John Taylor(1983) *From Modernization to Modes of Production: A Critique of the Sociologie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London:Macmillian).

벌어 브르지아 지식인들의 담론으로 취급해 볼 수도 있다.<sup>5)</sup> 자유주의 발전이론의 경험적·비경험적 성격을 모두 들쳐보면 거기에는 지배 브르지아 상부구조의 안정성과 균형성이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서 쉽게 빠질 오류중의 하나는 경험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파슨스 이론의 경우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정치의 맥락에서 이념적 기능을 구분해 내는데 실패한 셈이다. 나아가 변화와 혼돈의 근원과 그 변화과정의 결과를 이론화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며, 이것이 實用主義 哲學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파슨스 이론의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도 지적한 대로 변하는 것(과정)과 변해 굳어진 구조와 유형(결과)을 어떻게 하면 구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통합하느냐이다.

끝으로 발전이론에서 중시하는 合理性은 心理學的 관점으로서 이것 역시 이념적 성찰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 단위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측면에 관한 近代化의 이론 논의(세속화·성취욕구·지위상실주의 이론)는 지배엘리트의 속성을 가리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엘리트 중심론이라도 그 근저를 보면 심리적 환원주의자나 제도주의자나, 자율주의자나, 중립주의자나 모두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 2. 保守主義 발전이론

保守主義者들은 보통 ‘近代’와 ‘傳統’이라는 두 개념을 망라적인 원칙으로서 인식·적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비판하는 일방, 실용적 변화라는 것이 과연 유용한 것이냐에 의문을 품는다. 실용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헌팅턴도 미국의 제도는 근대와 전통의 혼합체라면서 가장 지고한 정치적 가치는 효과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구조없이는 정치는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한다.<sup>6)</sup>

自由主義 입장과 保守主義 입장은 공히 계급이나 정치제도 보다 文化요소를 강조하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自由主義者는 파슨스의 행동체계 개념의 실용적 영향하에서 文化를 다루고 있지만, 헌팅턴, 실즈, 벤디크스, 니베 등은 傳統文化制度를 논하지 文化的 變化過程을 말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新生獨立國에서 기존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保守主義者들은 정치발

6) Samuel P. Huntington(1968) *Review Essay: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1, 25, 98.

전 세계에서 國家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政治發展도 오늘에 와서는 달리 정의되어 통제·기획·기술·안정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초점의 전환에 관해서는 저간에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톨리(Charles Tilly)로서 미국 社會科學協議會의 分科委員會중 비교연구그룹의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sup>7)</sup> 이런 가운데 自由主義 발전이론의 위력은 점차 쇠잔해 질 수 밖에 없었다. 自由主義 이념 자체가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오면 기울기 시작했던 데다가, 현실세계에서 미국정치는 후진국의 군사정권을 지원하는 모순을 자초했다. 동시에 국가의 실패를 들여다 보면 볼수록 그 決定 權限의 힘이며, 풍부한 자원이며, 公共統制의 상대적 독립성이며, 등등 모두가 기존의 자유주의 발전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치현실 때문에 자연 反多元主義의 입장에서 保守主義의 paradigms를 재현시키게 되었고, 또한 合理主義 選擇論者(rational choice theorist)들도 실용적 다원주의 paradigms를 공격하게 되었다. 여기서 종래 미국의 이익집단들이 규제영역을 장악하여 위협한 침체국면을 조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벤틀리트루만 모델은 이제 더 이상 설명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자유주의에서 통제로 가는 新民衆主義를 내세우게 되는 것도 이런 추세의 일환인 듯 하다.

발전이론에서 新보수주의 경향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미국 사회과학 협의회 「국가와 사회구조」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영글어 갔다.<sup>8)</sup> 동시에 合理主義 選擇論者들도 이에 가세해서 階級現象때문이 아니라 私益과 公善간의 대립과 모순 그리고 조직과 집단의 경직성 등 때문에 실용주의 다원론자들의 自由主義理論은 현실세계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新保守主義者들은 국가가 단순한 法的 허구거나 정치적 강요를 오도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이들이 시도한 국가론의 재현(*Bringing the State Back In*)은 그러나 맵스 웨버와 오토 힌제가 제시했던 국가의 개념이상의 경지를 넘어서지 못했

7) 그는 기존의 비교정치와 정치발전연구에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正統性을 수립하려고 애썼다. 이 움직임은 國家論者들중 社會構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보다 활발해진다. Charles Tilly (ed.) (1975)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8)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뉴스레터를 발간하면서 서로 활발한 의견교환을 한다. 1983년 처음에 이 위원회의 구성을 계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학자로서 Charles Tilly를 위시해서 P. Evans, A. Hirschman, P. Katzenstein, S. Krasner, D. Rueschemeyer, T. Skocpol 등이다.

다.<sup>9)</sup> 그러면서도 국가의 맥락에서 찾아져야 마땅한 관료조직의 정치적 역할을 객관적 견지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사정을 보면 국가를 정치적 의미로 이론화시킨 작업이 거의 전부하다시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권력을 향유하는 행위자로 묘사된다. 국가가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는 능력은 “국가의 자율성”으로 표현된다. 국가의 자율성은 공익을 결정하는 정치제도의 역할, 사회와 정치를 재구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 그리고 유능한 관리를 충원하는 일등과 관련되는 과제이다.

이들 입장은 정치 행위자를 두 종류로 나누어 인지한다. 하나는 국가 행위자(state actors)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행위자(societal actors)이다. 이들은 물론 실용적 다원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形而上學的 一元論(metaphysical monism)을 부인한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이념적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중에는 자유주의자도, 급진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있을 수 있게 된다. 국가론을 재등장 시킴에 있어서 굳이 이념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급진주의나 보수주의 입장이 국가의 중요성을 경험적 근거 없이 알아들이는데 적극적이다. 경험적 근거를 찾지 않는 이유는 브르지아 없이 브르지아 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이나, 프로레타리아 없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국가는 사회계급과 무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다양한 이념적 입장을 취해도 과학적 입장에서는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이 국가론자들이 국가행동을 ‘사회적 참여’의 개념으로 대체하려는 한, 이들은 공히 反自由主義者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그래서 保守主義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발전하는 체제에서 국가를 강조하면 정치적 자유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것도 이들 입장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후진국, 비서방국가에서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는 오히려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논증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이같은 생각 조차도 실용적 다원주의적 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9) P. Evans, D. Rueschmeyer and T. Skocpol(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Leonard Binder(1986) “The Natural History of Development Theor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8:1(January), 3-33.



### 3. 네오마르크시스트 발전이론

지금까지 모아온 自由主義 발전이론이 비판을 받게 되는 역사적 근거는 미국이 과거의 쿠바·칠레·월남·이란, 그리고 현재의 중미국가들에서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실망하고 불만에 차게되는 여러 사건들이 실용적 다원주의가 비합리적인 감상주의에 젖어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실질적인 근거가 희박한 자유주의가 자체 입장을 재정비하게되는 때에는 保守主義 발전이론에 대한 마르크시스트비판이 한 몫을 했음을 부인치 못한다.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회의는 또한 발전이 혁명(문화)없이 가능할 것인가, 혁명이 일어나도 발전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보수주의와의 이 논쟁은 끝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마르크시스트의 발전이론중 혁명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발전이론이 자연 마르크시즘과 논쟁을 벌리게 되는 여지가 이런 데서 생기나, 실제로 마르크시즘은 발전이론 그 자체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低開發에 관한 이슈라든가 세계 자본주의의 파급이 가져오는 '진보적' 결과와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로서의 레닌의 帝國主義, 세계 혁명으로 진행되어가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등이 발전과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수궁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소련은 러시아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에 혁명론적 발전의 입장을 개진해 왔으나, "하나의 지배적이고 통합된" 소비에트의 발전이론은 없다고 보겠으며, 동시에 제삼세계 어디에서 왜·어떻게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는 소련의 외교정책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지 학자들이 왈가왈부해서 해결될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서방의 경제발전 개념으로 소련의 변화와 발전을 보는 것은 소련 당국도 원치 않는 바이며 이론과 현상과의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마르크시스트 파라다임은 소련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해 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가간의 국제경제교류가 결국 저개발만 심화시킨다는 논지들을 펴며 사회주의 혁명만이 이 비대칭관계를 끊는 길이라고 주장하나 각 국가들 대로의 특이한 발전상태며 계급구조며 정치제도에 관한 성찰없이 막연히 주장하는 모순을 덮기 어렵다.<sup>11)</sup>

11) 이런 입장은 A.G. Frank 같은 학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Andre Gunder Frank(1967)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New York: Monthly Reriew Press).

마르크시스트 이론을 말한다면 적어도 두가지 분류가능한 문제를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저개발에 관한 설명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제삼세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한 환경 결정론의 문제이다.

첫째 문제인 ‘저개발’은 제삼세계에서 資本主義 發展이 왜 전개되지 않는지에 관한 의문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략 세가지로 집약된다. 즉 하나는 비교·노위의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개발은 불평등, 부등가 교환으로 인해 야기 된다는 견해이다. 둘은 저개발이 잉여가치의 차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는 생산 관계나 생산조직에 의해 생기고 구조적으로 노동에는 적게 환상된다는 입장이다. 셋은 資本主義 生産樣式이 들어와 국내의 내생적 생산양식(아세아적 생산양식이나 봉건적 생산양식)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공생하는 가운데 접합하는에서 저개발이 야기된다는 견해이다.

고기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은 아세아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국가에는 외부세력이 침투해 歴史的 唯物論을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발달이 혁명으로 이어지는냐의 여부는 국내 부르주아나 비물질적 힘의 위력을 일단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사회의 어느 부분은 産業 프롤레타리아에 해당하는 집안이 있음으로써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행요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농민이나 농업 노동자가 혁명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근거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없이도 제삼세계에서 혁명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찾거나, 아니면 제삼세계 마르크시스트들에게 자본주의 체계가 몰락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資本主義가 후기에 접어 들었다고 해도 그 세가 약화되는 징후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자체 모순은 있다해도 자본주의가 몰락한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인지도 모른다. 논의의 초점은 후기 자본주의가 고통을 연장시키면서도 몰락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인데, 그것은 저개발 국가의 生産樣式 接合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sup>12)</sup> 그것은 도시국가-(metropolitan countries)에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가무리 착취를 당해도 노동의 상대적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조차도 덜 착취당하는 셈이어서 반대로 돌변하기 보다는 주어진 고난의 여

12) 이 문제에 관하여는 Ralph Miliband, Ernst Mandel, J. Habermas 등이 각기 주장을 펴나, G. Kay의 의견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Geoffrey Kay(1975)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London: Macmillan).

진게 순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삼세계의 후진국들은 그들대로 固有文化와 傳統에 맞는 개발방식을 찾고 때로 독제적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제로 논의를 모으면 자본주의가 언제 몰락하느냐의 근본적인 의문보다 文化的 要因과 국내 브르지아의 역할등에 관해 보다 관심을 쏟고, 결국에는 從屬상태에서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이러한 발전은 마르크스의 기본 명제는 확인해 주지만 레닌이 주장하는 바 세계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안 국가’(proletarian nations)의 역할은 부인해버린다거나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다루지 않는 것이 없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혼란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자본주의 후기단계, 아세아적 생산양식, 제삼세계국가의 혁명적 역할, 세계경제체제, 경제이론의 과학적 성격과 위치, 생산양식 접합론, 종속적 발전 및 독제적 개발 등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어쩌면 혼란스럽기조차한 여러 관련성 때문에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自由主義論者들이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연합적 종속적 발전이론(associated dependent development theory),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theory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세계체제이론(world systems theory) 및 사회혁명 수정론(revisionist theory of social revolution)등이 그것이다.<sup>13)</sup> 이론마 新自由主義랄 수 있는 이들 입장을 모아 검토해 보면 혁명없이 안정된 자유정치체제에서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논지를 펼 수 있을 지 모른다. 아직 입지가 확고하지 못해서 政策決定者들에게 제시할 만한 政治公式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기는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어진다.

새로 모색되는 패러다임은 물론 실용적 다원주의 일 수는 없으며 마르크시스트이론의 요소를 다루는 것인 바, 여기에는 (1) 周邊部 資本主義와 階級形成, (2) 資本主義 발전에 내재된 모순 및 (3) 革命의 전제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自由主義 발전이론을 비판하는 선봉장으로는 아마 테일러(John Taylor)를 꼽

3) 참고할 문헌은, F.H. Cardoso and Enzo Faletto(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Marjory Mattingly tra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uillermo O'Donnell(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Theda Skocpol(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mmanuel Wallerstein(1974) *The Origin of the Modern World System*(New York: Academic Press).

을 보았었는데, 그는 제삼세계 국가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급구조, 잉여가치의 전용, 지배계급의 억압조건 재생산방법 및 이념적 입장과 관련된 것을 설명치 못하는 이론은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한다.<sup>14)</sup> 혁명의 조건이 성숙치 못하는데 혁명을 제의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기본 입장에서 탈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개발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테일러는 종속개념보다 生産樣式 接合論을 앞세워 강조한다. 資本主義와 前資本主義 生産樣式이 대다수의 제삼세계 국가에서 共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構造化되었기 때문에 상이한 생산양식이 특이한 형태를 띠고 서로 의존하는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체계가 하나의 동질적인 생산양식으로 모아진다는 自然法則을 부인한다. 그것은 마치 발전이론가중 文化的 近代性이 전통을 몰아내지 않는다는 입장과 유사하다. 합리적이고 물질적인 설명이 각기의 구성과 형태를 위해 자리 잡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자본주의가 어떤 길로 가느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알투세 편에서서 브르지아 經驗主義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시기(위기)주의(Conjuncturalism)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테일러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가 쓰는 난삽한 용어가 일상용어로 잘 전환되면 오히려 경험적인 기술조차 가능한 것이 그의 입론이라고 하겠다.

### Ⅲ. 自由主義 발전이론 再考

이들 이외에도 여러 주장은 많이 개진되었다. 마르크스 社會科學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여러 새롭고 과감한 제의를 하는데, 이에 대해 自由主義 발전이론가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실험로 들어 이들 국가가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이들 국가들이 주변부의 위치에서 主 주변부로 언제 옮겨갈 것이며, 자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브르지아 계급이 등장할 것인가를 회의하면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쥬엘라에서 과연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들 의문에 대한 답을 마르크스 社會科學에서 찾기 보다 자유주의론자들이 스스로의 입장을 수정해 가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려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발전이론이 다시 재현되는 인상마저 짙게 해 준다.

14) John Taylor(1983) *From Modernization to Modes of Production: A Critique of the Sociologies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London: Macmillan).

이에 관해 몇 학자의 주장을 일별해 본다. 우선 칼도소와 파레토(F.H. Cardoso and Enzo Faletto), 그리고 에반스(Peter Evans)들은 종속하에서의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한다. 외부의 질서(국제경제질서 등)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발전은 기업가 집단의 등장과 같은 내생적이고 토착적인 힘에 의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계급 갈등과 계급형성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문제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선행요건과 연결된다는 점도 간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과정을 거치느냐의 여부는 나라마다 사상이 다를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에반스의 지적대로 官僚의 權威主義와 유지한 맥락속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하고 軍部支配者간의 투쟁으로 설명해야 옳을 지 모른다.<sup>15)</sup> 에반스는 古典的 資本主義의 발전에 낙관론을 펴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權威主義 등장 배경을 설명하는 오도넬의 경우는 막연한 개념과 논리의 비일관성(민주주의 등장을 하나의 대위론으로 내세워)으로 혼란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간의 연합으로 설명하려는 것과 기술과 군부와와의 연합으로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위기를 모면해 간다는 설명같은 것이 그의 이론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런 연합은 수입대체산업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발달을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民衆主義·民族主義 정권을 대신해 관료적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간에 얽혀 있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오도넬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가와 프로레타리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모순된다는 점이 아니라 민중과 국민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국가가 정작 이들 계급의 이해는 신장시키지 않는 문제간의 모순인 것이다. 오도넬의 이론은 마르크시스트의 분석구조를 원용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재건을 통해 中間집단을 키워나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념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이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를 어디에서 찾을 지 의문스러워진다.<sup>17)</sup>

오도넬의 추상성에 비하면, 왈러스타인(I. Wallerstein)의 세계체제이론은 실제가 담긴 역사적 연구를 해서 파라다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 점이 돋보인

15 Peter Evans(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6 Guillermo O'Donnell(1979)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David Collier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 L. Binder, *op. cit.*, 26.

다.<sup>18)</sup> 국내계층구분보다는 국제계층구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준주변부 국가의 특수역할에 주목하여, 그는 市場과 政體가 지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에 주목을 환기시킨다. 레닌의 帝國主義 이론을 모방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간의 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를 혼란시키지 않고 범국가경제주체와 국가정치 주체와 같은 이중체제가 옮겨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는 경제단위를 실재적인 것으로, 그리고 정치단위를 명백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양자는 실재하는 것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양자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잘 접합되지도 않아 한쪽의 변화가 다른 한쪽의 변화를 반드시 자아낸다고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치체제가 경제체제간의 비접합성이랄까 하는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로 하여금 번영하고 나아가 정통 마르크시즘의 기대 이상으로 번영하는 지도 모른다. 여기서 어떤 변화나 혁명과 관련지워 주목되는 것은 준주변부 국가의 역할인데, 가능하면 주변부 국가를 착취하면서 중심부 국가로 이동해 가려는 유혹이 어느국가에나 있고 또 서로 경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제삼의 세력과 운동을 고취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 社會主義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도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갖는 관심은 世界革命의 가능성인데 그 전도가 밝게 비치기보다 3 개별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번영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사회의 체제가 자본주의의 착취적 요소를 종식시켜 국가간에 평등을 구현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전체의 富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등가교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불평등의 속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평등보다 풍요를 택하려는 사람들에게 世界社會主義體制라는 것은 그리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세계체제이론이 자본주의 후기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궁금증을 풀지 못하면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레닌의 이론이 資本主義의 동태적인 면을 간과했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세계성을 덜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성은 혁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로 미루어 보면 마르크스-레닌 이론에서 말하는 후기 자본주의 문제는 지극히 자본주의 자체의 성격 그대로이며 이것이 세계체제로서 보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왈러

18) Immanuel Wallerstein(1974) *The Modern World System*(New York: Academic Press).

스타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후기 자본주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며 마르크스-레닌의 책을 써서 그 입장을 논박해 오히려 自由主義 발전정책을 정당화시킨 공헌을 했다고 하겠다.<sup>19)</sup>

社會主義 體制로의 전향이 가능한가? 또 그것이 옳은가? 資本主義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自由主義 발전이론이 맞는가? 革命은 어디서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들이 이념적 시각을 달리하는 발전론자들간의 끊임없는 논란이다. 혁명은 힘을 구축한 반체제 혁명세력에 의해 가능한가, 아니면 국가관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마비되어 스스로 몰락하면서 가능한가. 어떤 형태나 어떤 성격의 혁명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또한 어떠한 것인가.

전통적 농업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한 중국처럼 혁명은 오히려 단기적이고 權威主義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인도처럼 브르지아 엘리트가 농업을 국내의 시장과 잘 통합하여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브르지아 議會主義」가 극장한다. 어느 경우나 폭력이 개입되고 근대화되며 생산성을 높인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일반대중에게 이로운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발전이론의 견지에서 보면 혁명과 비혁명이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혁명은 경제적 근대화의 필수적 임무(농업부문의 개혁) 수행을 실패한 결과인데, 변화의 대가를 지금 받겠느냐, 아니면 나중에 받겠느냐의 차이일 뿐 도달하는 시점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식의 혁명보다 인도식의 신사적(상류계급적) 변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점을 무어(B. Moore)가 분명히 하면서 마르크시스트 혁명은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20)</sup>

스카치폴과의 대비에서도 밝혀지는 바와 같이 관료의 위기 때문인가 아니면 농업위기 때문인가에서 혁명의 초기단계가 조성되어 新世習의 관료를 갖게 되고 이들이 봉건지주계급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革命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불가피한 계급투쟁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혁명위기가 行政的 엔트로피(열역학·정보전달의 효율) 상황에서 도래하는 것이든 아니든 이는 근대화를 저해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만일 귀족관료만 잘 처신하면 혁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이러한 견해를 보수주의자들

19) L. Binder, *op. cit.*, 29.

20) Barrington Moore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Boston: Beacon Press).

21) Theda Skocpol(1973) "A Critical Review of Barrington Moore's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Politics and Society* 4:4(Fall), 4, 34.

의 집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카치폴 자신은 브르지아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나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를 이란의 샤(Shah) 혁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이 自由主義 발전론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도처에 도사린다. 정치참여에의 욕구와 行政的 自律性의 확보간 갈등과 투쟁은 내연한다. 그 속에서 기존하는 제도와 체제는 강한 도전을 받으며 붕괴의 위협마저 느낀다. 초기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으면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갈 위험도 있을 것이고, 당장은 정치참여의 욕구와 공정분배를 누를 수 있으나 결국 민주화의 큰 물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의 위기를 제도 따지고 보면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공정한 재분배를 기약하는 위기로 서기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지 못할 때 민중의 힘은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 모델만 보면 실용적 정치 자유주의가 近代化의 길을 재촉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면서 무질서·무정부연한 혼란들을 감내하지 못하면 독재의 횡포·관료적 권위주의·무능한 정부등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과 혁명의 폭발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政治秩序와 社會經濟的 실재간에 오랜 균열이 생기고 만다. 즉 민중과 정부는 등을 맞대고 있는 꼴이 된다. 위기의 근원에는 마르크스가 말하고 오도넬이나 하버마스가 이어받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릭슨과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적 기원도 있는 것인 즉,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자신을 알고 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부단히 自己反省을 하면서 변화를 고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解放이다.

參與·再分配·自由등을 구가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길은 혁명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역시 自由主義 發展理論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혁명'의 단계에 이르기 전의 '위기' 단계에서 지혜가 모아 질지도 모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문제로 남는 것은 '위기' 그 자체의 뜻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요소간에 혼돈을 일으킨다. 生産樣式과 社會構成, 經濟體制와 政治體制, 國家와 社會, 中心部와 周邊部 등등이 그것이다. 그래도 위기 이론은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갖고 헌팅톤·네틀·알터 모델등과 연결되어 포르투갈·스페인·브라질·아르헨티나·그리스·터키·칠레·필리핀·버마·

22) 김광웅(1987) 『관료와 발전』(서울: 평민사).

23) 위의 책, 29-30.



한국등 국가의 위기상황 내지는 중간집단의 議會政治的 欲求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民主主義의 회복은 위기이론이 自由主義 발전이론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력을 보태며 가능해 질 지 모른다는 희망을 준다. 그렇다고 이 民主回復을 가능케 한다고 믿는 自由主義 發展理論이 보직성을 띤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각 나라의 歷史的·文化的 근거가 상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전현상에서도 自由主義 이론의 타당성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까닭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이념적 시각으로 이 나라 발전을 보며, 어떤 발전의 전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좀 더 냉철한 비판과 성찰하에서 숙고해야 할 과제이다.